

제주 4·3 70주년 토론회



제주 4·3 70주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2017. 1. 18(수) 14:00

벤처마루 10층 백록담홀

주최 :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준비위원회



강요배 작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준비위원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연구소, 오사카4·3유족회, 제주민예총, 육지사는제주사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꽃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무순

제주 4·3 70주년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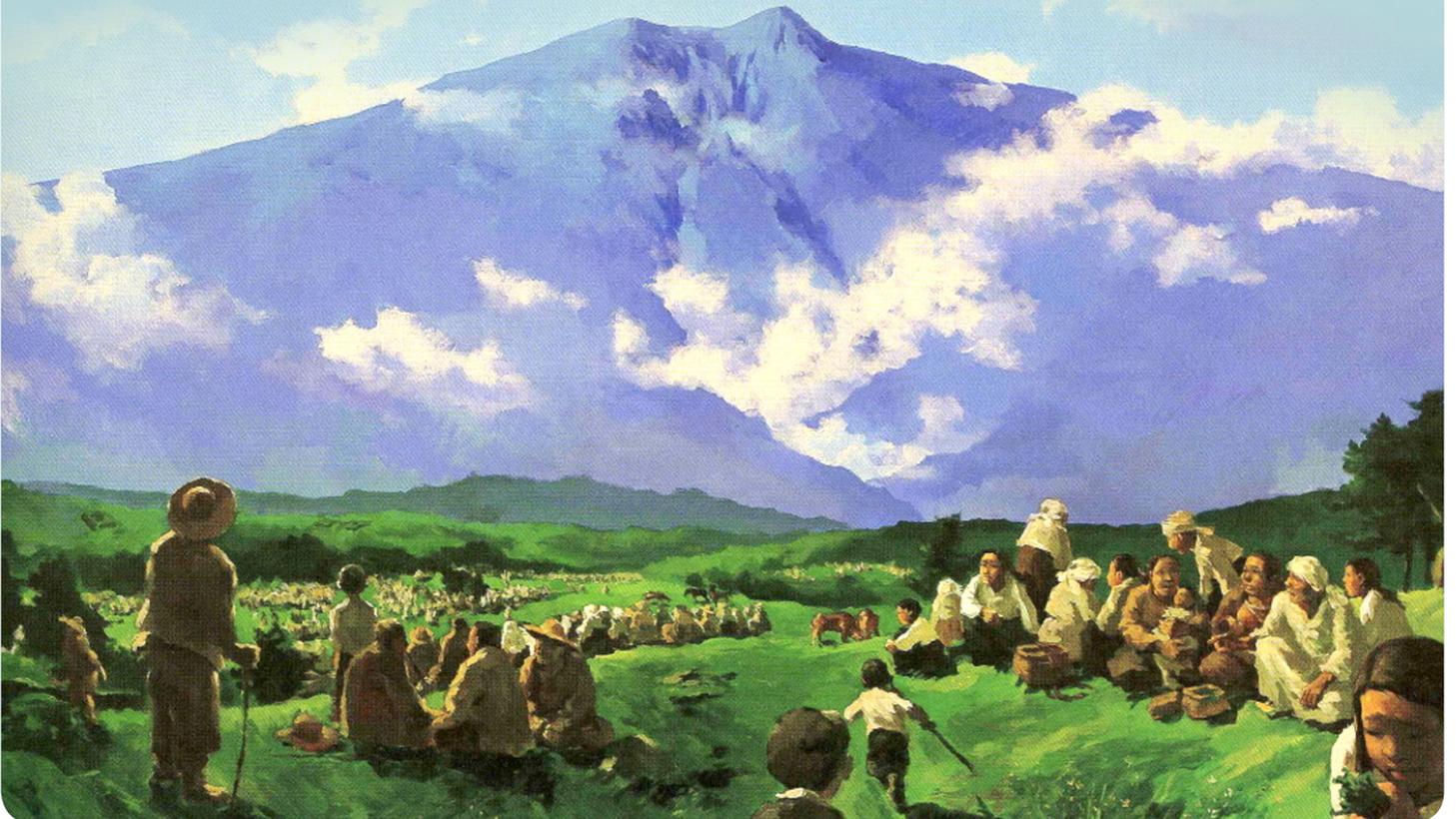
제주 4·3 70주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1부 (발표 및 주제토론)

- 좌 장 : 오영훈 국회의원
- 발표자 : 김수열 (제주작가회의 회장, 전제주민예총 이사장)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전 4.3연구소 소장)
- 토 론 : 오임중 (4·3유족회 상임부회장)
박찬식 (육지사는제주사름 대표)
김영순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2부 (종합토론)

- 좌 장 : 위성곤 국회의원
- 토 론 :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
강덕환 (전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김종민 (전 제주4·3중앙위 전문위원)
고창덕 (도자치행정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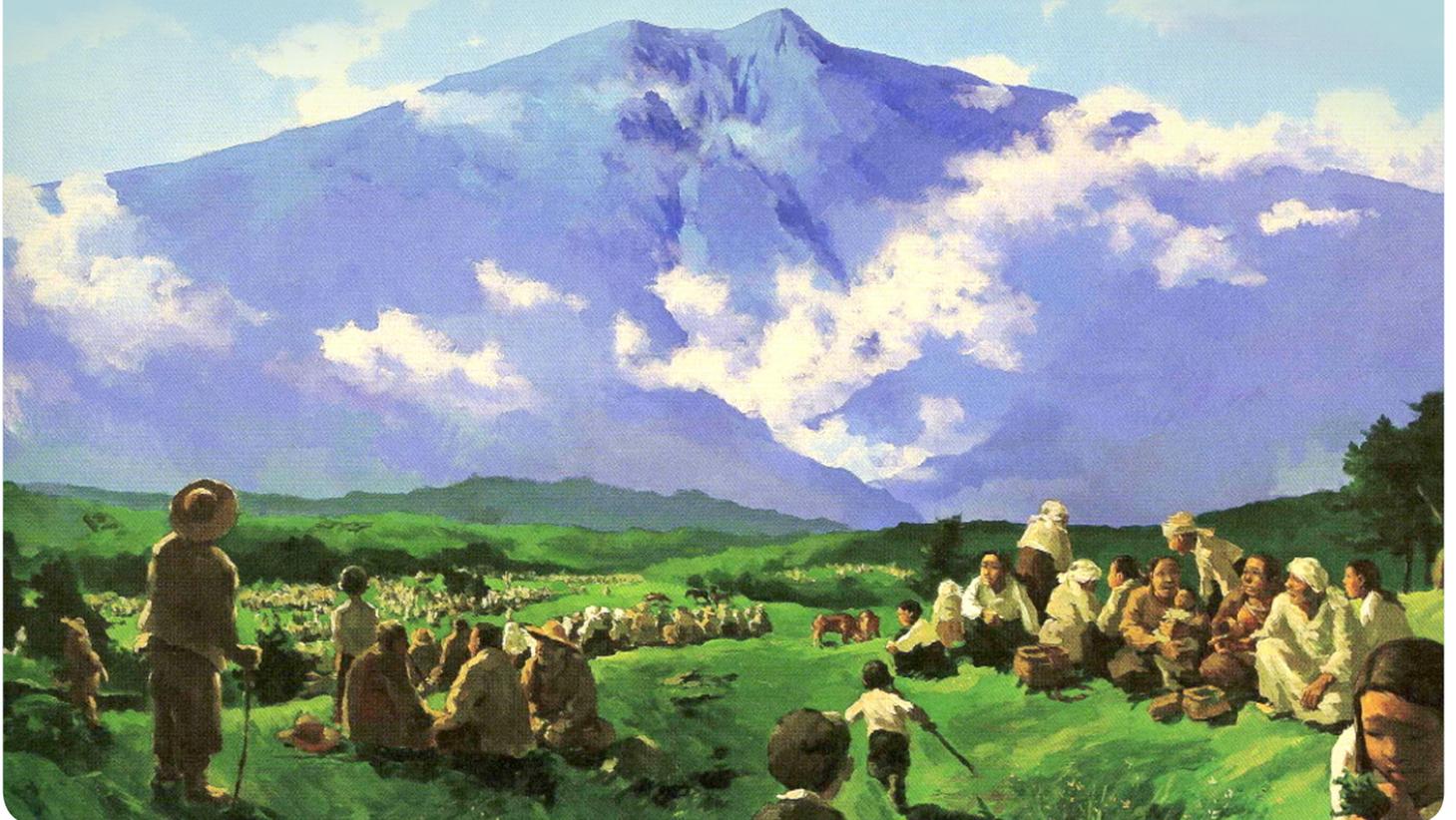


제주 4·3 70주년 토론회

제주 4·3 70주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1부 (발표 및 주제토론)

- 좌 장 : 오영훈 국회의원
- 발표자 : 김수열 (제주작가회의 회장, 전제주민예총 이사장)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전 4.3연구소 소장)
- 토 론 : 오임종 (4·3유족회 상임부회장)
박찬식 (육지사는제주사름 대표)
김영순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발제문>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제주 4·3문화예술을 중심으로-

김수열(제주작가회의 회장, 전 제주민예총 이사장)

1.

제주민예총이 4·3문화예술제(올해는 그 명칭을 ‘4·3문화예술축전’이라 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명칭을 쓰기로 한다.)를 치러온 지도 어느덧 20주년이 지났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고 갓 태어난 아이가 훌쩍 자라나 스무 살 청년이 된 것이다. 제주민예총 창립과 아울러 이루어진 제1회 4·3문화예술제의 기획과 집행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실무자로서 때로는 책임자의 위치에서 더불어 함께 해 온 필자의 입장에서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 글은 1994년 제1회 4·3예술제에서 2013년 제20회 제주4·3문화예술축전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살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제주4·3문화예술축전의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매듭을 짓고자 한다.

이 글의 모든 자료는 제주민예총에서 발간한 신문자료집 『4·3문화예술운동사 I, II』를 토대로 하면서 20년간의 4·3문화예술제 행사 팸플릿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힌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오늘의 발제가 제주민예총이 주최한 4·3문화예술 20주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시다시피 제주의 4·3문화예술은 민예총 창립 이전부터 비록 맹아적인 단계이긴 했으나 조직적인 문화

예술적 대응이 있어왔고 그 연장선에 제주민예총 4·3문화예술제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1994년 2월 27일 창립한 제주민예총은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초감곳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제1회 제주4·3예술제 개최’를 선언한다. 제주민예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4·3의 진상규명과 도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지역의 뜻있는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은 꾸준히 예술적 형상화 작업을 해왔다.”고 전제하고 “이전 작업의 성과를 계승한 제1회 4·3예술제가 도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도민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민화합의 장’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무렵 ‘4월제공동준비위원회’와 ‘4·3유족회’가 공동주최하는 ‘제주4·3희생자위령제’의 일환으로 ‘제1회 4·3예술제’가 치러지기를 제주민예총은 바랐으나 주관단체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독자적인 행사로 치러지게 된 것이 오늘날 제주4·3문화예술제가 된 것이다.

문예회관 놀이마당에서 초감제를 시작으로 음악위원회의 노래공연 「진혼」, 탐라미술인 협회회의 「제1회 4·3미술제-단힌 가슴을 열며」, 문학위원회의 「제1회 4·3예술제-문학의 밤」, 연극위원회 놀이패 한라산의 「사월곳-사월」 등이 펼쳐졌다.

1996년 제3회 제주4·3예술제에서는 처음으로 행사의 주제를 선정하기 시작하는데 ‘섬이여, 4월의 하늘이여’라는 테마를 내걸고 예술제를 진행하였다. 특히 제3회 제주4·3예술제에서는 반세기에 걸쳐 제주도민의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4·3의 예술적 형상화 작업을 통해 승화시켜 나가는 한편 4·3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1998년은 4·3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면서 제주민예총 제5회 제주4·3예술제를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제주민예총은 4·3유관단체들과 연대하여 ‘제주4·3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영훈 문무병 강창일 임문철 김평담)’를 결성하고 50년만에 처음으로 ‘4·3 50주년 도민해원상생곳’을 4월 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한라체육관에게 마련하게 된다. 한 가지 더 기억할 만한 것은 4·3의 진혼을 영상에 담은 다큐멘터리 「본풀이」가 공개되었다는 것이다. 「본풀이」는 고 진아영 할머니의 영상을 통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4·3 50주년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의미를 남겼다. 신산공원에 세워진 ‘4·3 해원방사탑’이 바로 그것이다. ‘유족 한 사람이 한 돌 쌓기’ 방식으로 세워진 이 탑은 다시는 이 땅에 4·3과 같은 비극적 참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다. 서울에서도 4·3 50주년의 열기는 이어졌다. 서울 연강홀에서 제주 심방 정공철과 황해도 강신무 정순덕이 만나 이틀에 걸쳐 역을하게 죽어간 4·3 원혼들을 달래는 행사를 가진 것이다. 1992년 4·3 역사화로 세간을 충격을 던진 강요배는 50주년을 맞아 작품을 보완하고 서울 학교재 갤러리 전시를 필두로 전국 주요 도시 순회전을 가짐으로써 4·3를 전국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1999년 제6회 제주4·3예술제에서 눈여겨볼 만한 작업은 탐미협이 준비한 전시 「보이지 않는 손, 보는 눈」이다. 이 전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4·3에서 미국의 역할과 힘을 상징한다면 ‘보는 눈’은 민중의 눈 또는 예술가의 눈으로 상징된다. 150평 규모의 전시 공간을 VTR이나 멀티슬라이드 액정비전 등 다양한 영상매체와 포토이미지가 융합하여 미국의 실체를 드러내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2000년 제7회 제주4·3예술제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제주도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4·3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예술제이기 때문이다. 제7회 예술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해 4월 1일부터 6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기억에서 부활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프레 제주4·3영화제’이다. ‘무명천 할머니’, ‘다랑쉬굴의 침묵’, ‘레드헌터2’, ‘이재수의 난’을 비롯하여 ‘광주 5.18’, ‘르완다 대학살’ 등 이른바 세계 도처에서 자행된 제노사이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서 향후 4·3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1년 제8회 제주4·3문화예술제는 참여 범위와 행사 내용을 한 단계 확장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는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예술제’라는 명칭을 ‘문화예술제’로 바꾸었고 그에 걸맞게 민예총 조직 내부에서도 문화예술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두어 운영하게 된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간에 산발적으로 작동하던 도외 단체들과의 연대 방식도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고 유사한 장르의 작업을 한데 모아 4·3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생산하자는 논의가 모아지게 된다.

그 대표적인 작업이 연행예술패들의 공동 작업인 『애기동백꽃의 노래』이다. 『애기동백꽃의 노래』는 놀이패 한라산이 지속적으로 작업해온 4월곳을 바탕으로 제주민예총 연행분과인 민요패 소리왓, 풍물굿패 신나락 등이 함께 하여 예술적 역량을 한데 모은 작품이었다. 석달에 걸친 준비작업과 40여 명이 넘는 출연진이 등장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연을 담보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작품으로 인해 테마곡인 <애기동백꽃의 노래>가 명실공히 4·3을 상징하는 노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제20회 4·3문화예술축전 음악제에서 처음과 끝을 <애기동백꽃의 노래>로 열고 닫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3.

지금까지 치러진 4·3문화예술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간에 이룩한 성과는 잠시 접어두고 냉정하게 되돌아보자.

우선 ‘4·3문화예술제’는 그 성격 자체가 일반적인 문화예술제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문화예술’ 앞에 수만의 주검이 가로놓인 ‘4·3’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주검은 이미 60갑자를 훨씬 뛰어 넘어 자의건 타의건 망각을 강요당하는 시점에 처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체험 세대들은 이미 유명을 달리 하고 있고 이후 세대들은 4·3 자체에 대해 무관심하다. 역사를, 그것도 망각을 강요당한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일은 기억의 부활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4·3에 대해 정당하지 못한 권력은 보수 우익을 앞세워 시도 때도 없이 4·3을 부정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음모할 것이다.

4·3 당시 이승만 뒤에 미국이 있었듯이 4·3을 부정하는 보수 우익 뒤에는 보이지 않는 혹은 그래서 너무 잘 보이는 권력이 도사리고 있다. 그 근거로는 다름 아니라 지금의 권력은,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이었음을 분명히 규정한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려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이후 수만의 억울한 희생을 신고한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4·3특별법 이전으로의 회귀란 4·3보다 더 지독한 제2의 4·3이다.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던 그들은 죽어서 공산주의자가 되었다’라는 현기영 선생의 수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4·3특별법이 통과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4·3은 해결되었다고 했다. 그에 반해 우리는 특별법 통과를 기점으로 이제부터 시작이

라고 했다. 우리는 ‘4·3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쓴다. 그렇다면 4·3문화예술제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4·3’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닌 4·3을 통한 해원과 상생의 큰곳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자신에게 준엄하게 묻자는 것이다. 이미 흘러가버린 물줄기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고 예술의 시작은 창작자에게 있을지언정 예술의 완성은 향수자와 더불어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자는 것이다.

군말이 많아졌다. 4·3문화예술의 앞날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던지고 접고자 한다.

첫째, 필자는 글을 쓰는 한 사람으로서 어느 자리에선가 ‘4·3을 넘어서는 4·3문학’을 얘기한 적이 있다. 그 말을 그대로 살려 ‘4·3을 넘어서는 4·3예술’에 대해 같이 고민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둘째, 앞에서 4·3은 망각에 대한 투쟁 즉 기억을 위한 싸움이라고 했다. 누구에게 4·3을 기억하게 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했으면 한다.

4.

이제 제주 4·3이 7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여 2017년 제주 4·3은 70주년을 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가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나물에 그 밥’,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세간의 평가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기 위해 몇 가지 제안 혹은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발제자로서의 책임을 면할까 한다.

우선 2017년 제주 4·3을 통해 70주년 제주 4·3 사업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 폭넓은 진단과 아울러 70주년을 준비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시적이지만 새로운 조직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어렵다고 에둘러 갈 일도 아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나온 4·3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다가올 4·3의 밑그림을 그리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1998년 제주 4·3 50주년을 맞아 ‘제주4·3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함께 운영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5대 해결원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 진상규명 2) 명예회복 3) 책임자 처벌 4) 배상 및 보상 5) 정신 계승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순차적으로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니라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지난 해 국가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국정교과서 파동에서도 드러나듯이 부정한 권력과 집단은 언제든지 제주 4·3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4·3이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멈춰서고 있는 시간과 공간만큼 저들은 그 빈자리를 꿰차고 들어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다시 돌아가자. 70주년을 맞이할 조직은 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강점과 약점) ②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조직 및 사업의 가치) ③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기회와 위협) ④ 다른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는가?(대중의 욕구)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분석위에 기조를 설정하고 추진과제를 제시하자는 것이다.

둘째, 물론 발전전략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폭넓게 논의가 되겠지만 제주 4·3의 성격을 재점검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그 성격으로 하고 있다. 그 이후 4·3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민통합’과 ‘화해와 상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어느덧 4·3은 정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60년을 훌쩍 뛰어 넘었다. 그 동안 4·3의 지평이 넓어졌고 그로 인해 자치단체 산하에 4·3사업소가 들어서고 4·3평화재단이 들어섰다. 겉으로 보기에 4·3운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제주 4·3 70주년을 기점으로 무엇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의견 수렴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망각으로부터의 탈피’, ‘4·3 기억의 재구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아다시피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10년을 한 주기로 한다면 7개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미 4·3체험 세대는 사회 구성의 중심 세대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4·3 정신을 계승해야 할 미체험 세대들은 4·3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청소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이런 관점에 동의한다면 향후 4·3문화예술의 전략적 지향점은 보다 분명해진다. 미래를 이끌어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양민을 학살한 권력의 본질을 알리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들 또한 미체험 세대에 해당하지만 체험 세대와 맞닿아 있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네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에 날개를 달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주4·3 70주년, 논의의 준비를 위해서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 교수/전 제주4·3연구소장

- 4·3 70주년은 그 동안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의제와 주체를 재구성해야 하는 중요한 10년 주기이다. 이는 4·3을 직접 체험한 세대들의 마지막 10년 주기이기도 하고, 한국의 정치지형도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70주년을 계기로 4·3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세우는 3단계로 넘어서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 여기서는 향후 논의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일부의 과제들에 대한 대략적인 소묘로 같음하고, 70주년의 과업과 향후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다중이 참여하는 활발한 논의의 장을 통해 그 일치점이 수렴되기를 기원.

1. 4.3운동에 존재하는 10년 주기 과제

- 40주년(1988)에는 공권력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도 4·3 40주년을 기념하는 공개행사가 최초로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 이후 추모제가 도내외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전기.
- 50주년(1998)에는 핵심적인 4·3관련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제주지역 및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유족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주4·3특별법 제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전기.
- 60주년(2008)에는 4.3운동의 결실인 제주4·3평화재단이 출범(2008년 11

월)하고 조직적인 4.3사업이 수행되는 전기.

- 그럼, 70주년(2018)에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한 전기로 삼을 것인지?

이는 단계별로 나뉘어 그 성격을 규정해 볼 수 있다. 즉,

- 1단계는 민간주도의 4.3의 진상을 조사, 연구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단계로 특별법 제정 이전의 90년대까지의 활동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 2단계는 특별법 제정으로 4.3의 아픈 역사에 대한 제도적 해결을 일정 수준 이루어낸 단계로 특별법, 국가위원회 구성,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대통령 사과, 희생자 인정, 평화공원 건립과 재단 설립 등의 성과를 이룬 단계이다.
- 그동안 여러 정치적·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미루어두었던 과제들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70주년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3단계를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 성취와 현황

■ 현재까지의 성취

- 4·3진상규명운동을 통한 제도적인 법 장치(특별법)의 마련
-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사과
- 제주도 전역에 걸친 추념 공간 조성 및 추념비 건립, 추념일 지정.
- 4·3유족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 장치(의료비, 장제비 등) 마련
- 4·3의 의미를 기록하고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출판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 이런 내용의 7대 과제(대정부 7개 건의사항)를 정부에 요구하였고 부분적 성취를 이룬 셈이다.

▶ 7대 과제(대정부 7개 건의사항)

1. 정부의 사과
2. 43사건 국가추념일 지정
3. 진상조사보고서 교육자료 활용
4. 43평화공원 조성
5. 유가족 생계비 지원
6. 집단매장지, 유적지 발굴사업지원
7.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지속지원(천인증언)

■ 현재까지의 현황

- 아직 7대 과제는 진행 중이다. 더러는 성취라 볼 수 있지만, 이들 과제를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보완과 과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분석도 병행 되어야 한다.
- 7대 과제의 성과부분에서 우선, 정부의 사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림 없는 계승이 필요하다.

두 번째, 국가추념일 지정에 따른 지침사항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국민의례훈령 개정에서 제주4·3은 빠졌다. 이런 사항들이 촘촘히 지켜져야 한다.

셋째, 43평화공원 조성은 완료되었으나 전시기획의도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집단매장지, 유적지 발굴사업지원의 경우 진행형이긴 하나, 이

역시 유적지 발굴 복원사업에 대한 진행방향과 평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훼손 유적지에 대한 보전방안 필요.

- 7대 과제의 미완의 부분에서 우선, 진상조사보고서 교육자료 활용은 아직 미비하다. 실천 차원에서 43의 진상과 의미를 전국화하기 위한 교과서 반영이 필요하다.

둘째, 유가족 생계비 지원은 현재 도의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지속지원으로서 국내외 소재 관련자료의 추가발굴과 입수, 정리. 추가적인 43진상규명을 위한 자료확보의 필요성 상존.

3. 70주년에 즈음한 향후의 예측 과제

- 1) 일례로 4·3정신의 규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 ⇒ 만일 4·3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어 격화된 사건이거나 혹은 '참으로 특이한 시기에 발생한 특이한 사건'으로만 이해된다면, 역사의 실체로서 제주도민은 <몰주체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 ⇒ 만일 4·3이 <단지 이유도 없이, 혹은 부득이한 정치상황 때문에, 혹은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 속에서 무고하게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만 해석한다면, 제주도민은 역사의 객체로서 무기력한 존재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 ⇒ 만일 4·3이 <집단학살, 집단희생, 학살터 등> <슬픈 역사와 기억>으로만 거론된다면, 제주의 과거는 변방에 대한 특이한 호기심의 대상이거나 찬란한 관광지의 이면에 감춰진 또 다른 얼굴로만 거론될 것.

* 도대체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살려야 할 4·3의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 4·3은 우연한 사건도, 돌발적인 사건도, 일과성의 사건도 아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이 있는 사건이었고, 그 필연성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만일 4·3이 그럴만한 필연적인 이유에 의해서 발발한 것이라면, 옳든 그르든, 좋든 나쁘든 <4·3의 정신>은 그 안에 깃들여 있을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규명해야 하는 <4·3의 의미>도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이를 찾는 과제는 <미흡한> 가운데서도 많은 진실을 담고 있는 『제주 4·3사건진상보고서』가 규정한 <정의>에서 출발 가능하다.

■ **제주4.3사건의 정의** :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

* ‘단선·단정 반대’ 실상 : 43이 발발한 1948년 4월 3일 시점(1948년 4월 12일 기준)에서 존경받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이나 김구식 선생 등은 물론이고, 당시 90%가 넘는 압도적인 국민들도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¹⁾

1) 한국여론학회는 1948년 4월 12일 서울에서 지나가는 사람, 일명 ‘통행인’ 1,26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당시 선거인에 등록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934명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328명. 선거인에 등록한 사람 중 자발적으로 등록, 즉 투표를 하고 싶거나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등록했다는 사람은 934명 중 84명에 불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90%가 넘는 정도로 강했다는 뜻. 「선거를 통해보는 한국 근·현대사(1)·5·10 선거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http://nec1963.tistory.com/740>).

- “당시 서울, 부산 등지에서는 치안이 확보되지 못해 야간이 되면 미군MP나 경찰의 총소리가 그치는 날이 없는 불안한 치안상태였고, 각지에서는 민중의 시위·폭동, 공산주의자들의 선동, 유언비어, 정치밀회 등이 난무하였었다. 그러나 여기 제주도는 다른 세계와 같은 평온한 별천지였다.”(김익렬 유고)

- 43사건이 격화되면서 내걸게 되는 ‘단선·단정 반대’ 기치는 해방된 조국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보편적인 민족염원을 표방하는 전국적 차원에서 분출된 주장의 일환.

*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 배경 : “제주도 4·3사건을 미군정의 감독부족과 실정으로 인해 도민과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며, 관(官)의 극도의 압정에 견디다 못한 민(民)이 최후에 들고 일어난 민중폭동이라고 본다. 당시 제주도 경찰감찰청장이나 제주군정장관, 경무부장 조병옥씨나 미군정청장관 딘 장군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건을 옳게 파악하고 초기에 현명하게 처리하였더라면 극소수의 인명피해로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었던 단순한 사건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김익렬 유고) “최초 미군정이나 내가 판단한 폭동의 원인은 제주도에 이주하여온 서북청년단원들이 도민들에게 자행한 빈번한 불법행위가 도민의 감정을 격분시켰고 그 후 경찰이 서북청년단에 합세함으로써 감정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어 급기야 극한의 도민폭동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공산주의 이념투쟁 폭동으로는 볼 수 없었고 또 경찰력에 대항할 만한 그러한 조직이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군정의 책임자나 연대장인 나의 일치된 판단.”

* 무장봉기의 실태²⁾ : 1948.4.3 새벽 2시(30정의 소총으로 무장한) 350

2) <김익렬 연대장 실록 유고>.

명의 무장대가 12개 경찰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하면서 무장봉기가 시작. 압수된(1948.5) 무장대의 무기는 죽창, 도끼 같은 원시적 무기(『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 다양한 이름의 <혁명>에는 이를 위한 경제적/사회적 조건과 이에 따른 모순의 축적, 이를 실행할 물리력 등이 전제.

- 경제적/사회적 조건으로는 “제주도는 빈곤하긴 하지만 육지와 같이 전통적으로 지주와 소작인과 같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이 없었다. 즉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애용하는 계급투쟁의 구실을 줄 수 있는 착취계급이 없었다. (중략) 이런 실정이고 보니 공산주의 사상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 도민들에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 형편”이었고, 당연히 이에 따른 사회적 모순의 축적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게다가 ‘30여정의 소총과 죽창, 도끼 같은 원시적 무기’ 정도의 물리력으로 달성하는 있는 혁명이나 새로운 국가건설의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 주한미군사령부 정보보고서인 「G-2보고서」(1949.4.1)에 따르면, “1949년 3월까지 제주도 인명피해 15,000명이며, 게릴라들이 본토나 북한으로부터 병참지원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러한 보고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등 그간의 상황을 종합보고.
- 따라서 무장봉기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된 거사>가 아니라, 경찰·서청의 탄압에 저항하기 위한 최소의 물리력을 토대로 하여 <앉아서 죽느니, 서서 죽기를 각오한 의연한 봉기>.

2)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해결(청산/ 치유)을 완성할 돌파구를 열자.

- 배보상의 쟁점화 (배보상 문제에 관한 학술적 차원에서의 지원.)
- 수형인 문제 해결
- 미국의 책임 문제 본격 대응
- 주요 책임자에 대한 상징적 단죄

- 反헌법행위자나 4.3 음해와 모독행위 처벌규정을 담은 법률의 제정/개정 필요성 제시.

-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3) 4·3의 세대적 계승의 토대를 마련하자.

- 대중적 세대계승을 위한 사회문화적 여건을 구축(교육, 문화, 다크 투 어리즘 등)

- 학술 연구의 기반 구축 (1차 자료 아카이브 등) 과 새로운 세대 연구자의 발굴 지원

- 후세 교육의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4.3의인의 발굴과 현양사업 제기.

- 4·3운동 주체의 세대적 재구성

4) 70주년 기념행사 추진 주체 구성

-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처럼 7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4.3단체를 비롯하여 제시민사회단체와 일반인도 참여하는 전도/전국 차원의 추진위원회 구성.

- 도민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70주년 기념 위원회 구성. (범도민적 기구)

- 국민지지 역량을 끌어내기 위한 범 국민위원회를 구성(범국민 기구)

- 통합 추진단체인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중심의 사업을 설정하고, 제단체가 추진하는 고유한 사업은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

고령의 유족 어느 분들에게는 마지막 기념사업이 될 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욱 고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제주4·3 70주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유족회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기에는 조심스럽고, 개인적인 경험과 바램을 곁들여서 소견을 밝히려 한다.

1. 무엇을 말(言)할 것인가?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며 제시할 수 있는 말(言)은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 대부분은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라는 대명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방법론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질 것이다. 또한, 기념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게 될 주체는 그 의견들을 빠짐없이 소중하게 투영시켜야 할 것이다.

그 다양한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대화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마냥 가벼운 일상대화와는 달리 우리가 논의해야 할 말(言)의 대상자는 정치권을 포함한 국가권력이 될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여태껏 제주4·3에 무관심했던 일부 국민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사청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끊임없는 대화>

제주4·3은 엄연하게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어진 집단학살과 인권유린의 복합적인 역사로 해석할 수 있다. 구태여 그 발발원인이나 시대적 배경 및 배후세력 등을 논하지 않더라도 국가라는 조직은 일체의 위험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국가공권력에 의해 제주도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은 철저히 짓밟혀졌다. 즉, 국가(미군정 포함)는 가해자이며, 제주도(제주도민)는 피해자인 것이다.

당시 제주도민의 대다수가 피해자이며 현재 제주도민의 대다수가 그 유족임을 감안하면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대화의 형식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일종의 협의 혹은 합의, 조율 또는 조정 등의 절차가 수반되어지는 결코 수월치 않은 과정이 될 수 밖에 없다. 여태껏 진행되어진 4·3해결의 과정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발생하고 그 진행과정이 다소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가해자인 국가가 진정성 없는 대화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어떠한 협의 혹은 합의를 위한 대화의 장에서도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가식적인 양심을 보이며 영터리 논리를 내세워 손익을 셈하려 한다면 그 대화는 어떠한 결론도 이끌어낼 수 없다. 특히 과거사 청산 문제에서는 대화당사자의 태도가 더욱 확실해야 한다.

<4·3해결의 성과와 최근의 상황>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과거 제주4·3 ‘50주년’과 ‘60주년’을 거치오며, 국가를 상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서 꼭 했어야 할 말(言)을 당당하게 외쳤고 그에 대한 급부로 상징적인 결과물들을 상당부분 이룩해냈다. 4·3특별법 제정과 진상보고서 채택, 4·3평화공원 조성 및 평화재단 설립, 그리고 최근의 국가기념일 지정 등 굵직한 결과물을 도출해냄에 있어서 제주4·3에 뜻을 같이하는 각계의 목소리는 절대적 역할을 했음이 명확하다. 물론, 미비한 부분들도 없지 않았으나, 제주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앙 정치권과의 적절한 협의하에 이루어 낸 소중한 성과였다.

하지만, 당리, 당락에 따라 국가정책도 쉽사리 바뀌어버리는 정치권의 습성때문인지 최근 10년 사이의 4·3해결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훨씬 퇴보된 경향이 짙다. 도리어 기존의 성과물들을 저평가하려 들고 덧붙여 4·3흔들기를 통하여 제주4·3 문제 해결의 거룩한 행보에 생채기를 내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경우에도 국정역사교과서 도입이라는 무리수를 두어 제주4·3의 역사를 축소·왜곡시키려 하고 있고, 공식행사시에는 4·3영령에 대한 묵념조차도 통제시키겠다는 취지의 훈령을 내어놓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리를 염려하여 가급적 행동을 명심하려는 보편적 상식을 뛰어넘는 몰염치한 정책과 방침을 거리낌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성을 보이는 정치권이 되길 바란다.>

대화의 당사자인 상대방의 태도가 불성실하여 반대편의 말(言)을 들어줄 마음가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논리적인 설득을 시도해도 공허한 에너지소비일 뿐이다. 대화의 장에 들어서려면, 적어도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기본적인 에티켓은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선량한 국민의 고충을 감싸려는 인도주의적 기본의식이 없는 한 영원히 ‘마이동풍(馬耳東風) 우이독경(牛耳讀經)’의 오류가 지속될 것이다. 조속히 국가 및 정치권이 더 이상의 마이(馬耳)와 우이(牛耳)를 버리고 국민의 뜻을 섬기는 열린 귀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4·3해결의 장으로 다가오길 바란다.

<하나된 목소리가 힘이 있다.>

쌍방대화의 기본적 예의조차 못 갖춰 우리들의 말(言)을 도통 듣지 않으려는 저들의 불통과 아집이 근본적으로 문제이겠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로서 가해자와의 대화에서 말(言)을 전달하는 우리의 대화방법이나 전달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해자인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에 대항하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치고,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리성을 견고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향성 제시가 선제되어야만 한다.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4·3운동을 전개하게 되면 소중한 역량들이 분산되는 낭비일 뿐만 아니라, 4·3해결방향의 본질을 깨트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방대한 4·3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풀어감에 있어서 그 어느 개인이나 특정단체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자의 입장대로 각양각색 풀어나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단언하건대 하나된 목소리라야 명분이 생기고 그 하나된 목소리에 제대로 된 힘이 실린다.

<결국, 무엇을 말할 것인가?>

유족회의 입장에서 70주년을 맞이하며 무엇을 말(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선뜻 몇가지로 요약하기가 쉽지 않다. 그간에 거론되었던 배·보상의 문제(국가 및 미군정의 책임에 대한), 수형인 문제, 유족복지정책 확대, 유해발굴 및 추가진상조사, 화해와 상생을 통한 평화·인권의 새로운 가치 창출, 지속적인 위령사업 및 기념사업 등 그 중요성을 순위로 매기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해서도 안되고, 협상의 조건으로 포기할 것을 강요당해서는 더욱 안된다. 이 모든 과제들은 반드시 실현한다는 전제하에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관이 공생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질 때 해결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언(前言)한 것처럼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국가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

2. 무엇을 할 것인가?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우리는 험한 풍파를 헤쳐내고 4·3해결의 실타래를 풀어왔고, 여러 가지 의미있는 성과물들을 이루어냈다. 특히, 50주년(1998년)과 60주년(2008년)을 기념하여서는 제주도 전체 뿐 아니라 범국민적(일부 한정적으로 해외사업의 성과도 있었음.)으로 4·3인식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이끌었다. 10주년 단위로 나름의 의미있는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4·3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을까?>

그렇다면, 다가오는 70주년에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해결이라는 공통분모가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그 큰 틀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미있고 내실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추진해 나가면 된다. 다만, 과거의 사례를 돌아볼 때 문화, 예술, 학술, 종교 등을 막론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과 행사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유족들의 참여도가 미비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어찌 보면, 일련의 기념사업들의 일차적인 목표가 4·3의 직접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해원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작 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위령사업과 추모사업을 제외하고는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짙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작년 5·18전야제에서 유족으로 구성된 ‘오월소나무 합창단’의 서툰지만 감동적 공연의 여운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고, 우연히 접하게 된 오키나와전몰자유족들이 치유의 목적으로 그린 비뚤비뚤한 그림들을 실은 도록(圖錄)이 내심 부러웠던 이유이기도 하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기에...>

이미 고령이 되어버린 4·3의 당세대들은 10주년 단위로 기념사업을 전개하는 현 시점에서 이번 70주년 사업이 마지막이 될 확률이 농후하다. 그 분들을 위한 소중하고 의미있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후세대들의 당연한 도리이다. 그 선물의 선택과 준비는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의 중요한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민관총파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70년전 제주4·3의 발단이 되었던 3·1절기념식 현장 발포사건에 대한 강경대응 때문에 공무원은 물론 교사, 은행원, 통신기관 등 도내 166개 민간단체의 4만여명이 3·10총파업을 강행하였다. 불의에 저항하고 올바른 국가건설을 위한 몸부림이었으나 철저히 폄하되었던 3·10민관총파업의 정신 중 제주도민 특유의 공동체적 결속력과 응집력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가치와 신념을 지켜내기 위하여 힘을 모았던 것처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당당하게 성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도민대화합'의 근본정신일 수도 있을 것이다.

3. 본질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70주년을 준비하느라 더없이 바빠질 것이다. 아니 일각에서는 이미 분주해지고 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향후 탄생할 통합적 추진체가 다양한 의견수렴과정과 검증된 여과과정을 통하여 튼실한 계획을 수립하리라 믿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4·3의 아픔을 딛고 평화와 인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4·3해결에 대한 순수한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의견과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 갈등과 분열이 발생되어서도 안 된다. 항상 이런 부분을 경계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진정한 4·3의 역사적 의미 창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70주년, 그리고 범국민위원회의 의미와 과제

- 제주4.3 70주년 토론회 토론문

박찬식(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 전 제주4.3범국민위 사무처장)

1. 범국민위를 만드는 의미- 50주년 범국민위를 돌아보며

Q 범국민위를 왜 만드는가?

- 단순히 이미 공인된 4.3의 진실을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규모 있고 전파력 있는 행사를 통해 알리려고 하는 것이면 재단이나 도에서 돈을 들여서 하면 된다.
- 큰 고비는 넘겼지만 미진한 과제가 남아 있는 정도라면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고 정권이 바뀌면 쉽게 될 수도 있다.
- 범국민위를 만드는 것은 그냥 행사나 로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힘을 모아내는 국민적 운동을 통해서 제기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나 과제가 있을 때 필요하고 가능하다.

Q 50주년 때에는 조금이라도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는 대의와 명분이 있었다.

- 4.3의 진실을 덮어 둔 채 반세기를 넘길 수 없다. 21세기로 넘어갈 수 없다. 당시를 그 참담한 사태를 겪은 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 50년을 넘겨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기필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열자. 그것을 위해 온 도민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달라.
- 처음에는 국가 차원의 해결을 위한 공론화와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정도가 목표였음. 그런데 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으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면서, 더 강력한 연대와 투쟁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해결이라는 성과를 쟁취함.

Q 그럼 이번에는?

- 4.3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조차 '4.3은 잘 해결된 거 아니? 뭐가 아직 남아있어?'라고 하는 상황.
- 아직도 4.3단체들의 일상적 활동을 넘어서 국민적인 지지와 참여를 모아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슈)가 남아 있는가?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만한 대의와 절박성이 있는가?

2. 70주년의 의미와 과제

Q 70주년을 맞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 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 7대 건의 중에서 아직 완수하지 못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
-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를 억제해 왔다. 참고 참아왔고 심지어 억압해 왔다. 혹시나 그간의 성과마저 날아가지 않을까. 또다시 이념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건 아닐까. 살얼음을 걷듯 성과들을 지킨다고 발버둥쳐 왔다. 그러나 정말 그간의 성과를 지키는 것으로 족한가?
- 그렇지 않다. 우리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첫걸음을 떼는 것에 불과하다.

0 “정의로운 과거 청산”을 시작해야

- 4.3특별법의 핵심은 “정의 없는 명예회복”이었다.
- 인권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해결의 원칙은
“주아네는 상세하게 과거청산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이 발췌해볼 수 있다.
①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전체가 진실을 알 권리 ②공정한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활동의 보장 ③진상조사기록의 보존과 공개 ④책임자처벌에 대한 요구 ⑤국제법원 외국법원에 대한 관할권 보장 ⑥공소시효 사면 비호권 등의 배제와 제한 ⑦국가의 배상의무(원상회복, 피해배상, 재할조치) ⑧국가의 상징적 조치(국가책임에 대한 공식인정,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복권의 공식선언, 기념 및 연례적인 추모, 역사교재 및 인권교재에 관련사실 수록) ⑨ 재발방지(관변폭력집단의 해체, 비상입법과 비상법원의 폐지) 등이다.
“(이재승, ‘인권과 과거청산의 측면에서 본 『4·3보고서』의 성과와 한계’, 2003. 9. 4. ‘제주4.3 진상규명의 현단계와 과제’ 토론회)
- 국가가 잘못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도덕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과로 끝내는 것은 도덕적 책임에 한정될 경우.
- 불법, 부당한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가 따라야 한다: 배보상
- 가해자에 대한 단죄: 사법적 단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정치적, 도덕적 단죄는 필요하다. 서훈 박탈, 주요 책임자에 대한 기록 공개 및 시각화 등.
- 피해 구제와 가해자 단죄를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전체적인 흐름과 총론적 성격을 드러내는 기존의 진상조사보고서를 보충하는 의미의 추가 진상조사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개별 사안별 각론적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전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나는 밝혀졌지만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조사는 시작도 안됨.

0 정명의 과제

- 초등학생들 질문.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개죽음 당한거야.
- 언제까지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렁이였는데 영문도 모르고 죽은 것으로 남아야 하는가?
- 물론 학살의 규모가 엄청나고 양상이 무차별적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죽음과 죽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당시 우리의 선조, 제주도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가 아니었다. 체계적인 지식이나 이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30만도 안 되는 인구에서 6만이 참여한 47년 3.1절 대회는 무엇이고, 공직자까지 참여한 도민총파업은 무엇이란 말인가?
- 제주도민들은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원했고, 자치를 원했으며, 분단이 아닌 통일 국가를 원했다.
- 단순히 4월 3일의 봉기가 아니라 전체 사건을 아우르는 기호로서의 4.3의 출발과 본질은 제주공동체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적 항쟁이었으며, 통일국가를 염원하는 운동이었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느닷없이 빨갱이 나라를 만들겠다고 봉기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 그런 의미에서 4.3은 지금의 촛불항쟁과 무엇이 다른가? 4.3을 남로당 폭동으로 매도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촛불항쟁에 앞장선다고 통진당 세력이 참여한다고 종북으로 매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고 백남기 어른이 농민운동을 했다고 농민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무엇

이 다른가?

- 언제까지 자랑스런 제주의 선조들이 비하되어야 하는가? 무장대다 양민이다 해서 죽음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해야 하는가?
- 4.3 100주년은 통일된 나라에서 맞을 수 있다. 우리의 염원일 것이다. 그 때에도 4.3에서 돌아가신 영령들이 '희생자'라는 이름으로만 남을 것인가? 통일의 유공자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
- 4.3이 무엇으로 남고 4.3의 영령들이 어떻게 불리어 지느냐는 그것을 기억하고 후대에 물려 주어야 할 우리의 책임이다. 통일된 나라에서 치를 4.3항쟁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 물론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수구집단이 발호하는 현실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해와 상생은 차이를 억압하는 틀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보장하는 열린 화해와 상생이 되어야 한다.

0 다시 70주년 사업의 의미에 대해

- 70주년 사업을 하고 범국민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결코 70주년에 품나는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다.
- 70주년을 기점으로 적어도 앞으로 10년, 길면 한 세대를 갈 수 있는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4.3 진상규명·명예회복 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도민의 힘을 모르고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 이는 관이나 지금의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민간의 사회운동 차원에서 밀고 나가야 할 과제이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민간이 운동으로 앞서 나가고 재단과 관이 따라오고 밀어주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큰 방향 속에서 서로 각자의 위상과 성격에 맞게 어떻게 역할을 나누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 4.3 체험 세대가 생존해 있는 거의 마지막 10주기이고, 다행히 정세도 지난 10년에 비하면 훨씬 우호적이다. 70주년 사업을 통해 4.3 진상규명·명예회복 운동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자.
- 50주년에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래서 범국민위를 서울에서 그냥 구성하면 되었다. 그러나 70주년은 상황이 다르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제주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고 책임 있게 이끌어 가야 한다.

<참고: 50주년 4.3 범국민위 주요 자료 발췌>

제주4.3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 활동 경과

1995. 8. 제주4·3연구소 정기 이사회, 4·3 50주년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

1996

11. 30 제주사회문제협의회(대표 김승만), 제주4·3사건 특별법 제정촉구 시민 대토론회(종로성당)

1997년

- 3. 7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범국민위원회 준비위원회 결성
- 4. 1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범국민위원회 공식 출범(한국기독교연합회관)
- 6. 7 제주4·3 홍보 거리 전시회(~6.10.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9. 20 여야 4당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제주4·3문제 해법은 무엇인가」(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12.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김대중 후보, 국회 특위설치와 특별법 제정,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한 제주4·3 문제 해결을 공약

1998년

- 3. 1 「제주 4·3명예회복의 해 선포식」(가톨릭회관), 백만인 서명 운동 시작(서울, 부산, 대구, 광주 및 인터넷 서명)
- 1.16-19 50돌맞이 제주 4·3 역사순례
- 2. 27 제주4·3 명예회복을 위한 도외 제주인 선언
- 3. 28~4. 5 「제주 4·3 제50주년 추모 및 기념 주간」 설정
- 3. 28 제주4·3 제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성균관대 어학원 세미나실)
- 4. 3 제주 4·3 웹사이트(<http://www.cheju43.org>) 개설
- 4. 4 「제주4·3 제50주년 기념식 및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촉구대회」(탑골공원)
- 4. 3~12 강요배 역사화 전시회(인사동 학교재화랑)
- 4. 4~5 제주4·3희생자 진혼굿(연강홀)
- 5. 6~12 4·3 역사사진전(인사동 도올아트타운)
- 5. 12~6. 28 강요배 역사화 전국순회전(5.12~19 광주 송원갤러리.
- 6.10~17 대구 월성 문화회관, 6.20~28 부산 가톨릭센터)
- 5. 정책기획특별위원회 구성, “4·3 특별법” 초안 작성과 정치권 교섭 착수
- 5. 7 새정치 국민회의, 제1차 「제주4·3 공청회」(제주 방송대학습관) 주최
- 8. 26~9. 5 후원금 마련 갈옷전(인사동 예나르)
- 9. 28 새정치 국민회의, 제2차 「제주4·3 공청회」(국회 도서관강당) 주최
- 11. 21 클린턴 대통령 방한 시 미 대사관에 “제주도 4·3 사건의 진상 규명과 미국의 책임을 묻는 서한” 전달
- 11. 27 청와대에 “제주도 4·3 사건의 진상 규명과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 11. 30 7개 종교단체(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 평화 실천협의회, 대한성공회서울교구정의평화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민중신학회) 공동으로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종교인대회’ 주최(성공회대성당)
- 12. “4·3 특별법” 제1차 초안 완성
- 12. 10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회장 박창욱)와 4·3범도민위(위원장 조승욱), 국회의원실과 각 당 원내총무실에 “국회4·3진상규명 특위 구성 건의서” 전달

1999년

1. 22 『제주 4·3 연구』출간 및 출판기념회(성공회대성당)
2. 25 제8차 4·3범국민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명칭을 제주 4·3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로 변경하고, 98년에 4·3을 대중화, 전국화한 성과에 기반하여 99년 사업의 중점을 정치권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에 두기로 함
3. 8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상임대표 김영훈, 양금석, 임문철) 결성
3. 22 제주 4·3 유족회(회장 박창욱), 제주 4·3 도민연대(상임대표 임문철, 양금석, 김영훈)와 공동으로 청와대에 “제주 4·3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청원서” 제출
3. 29 제주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관효스님, 임문철신부, 김덕연교무, 정한진목사), 「4·3치유를 위한 종교인대회」 주최
4. 3 「제주 4·3 제51주기 추모식 및 명예회복 촉구대회」(대학로 마로니에공원)
4. 3~8 재경 유족과 함께 「제주 4·3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명동성당)
4. 8 4·3유족회, 4·3도민연대와 공동으로 「제주4·3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및 특별법 제정촉구대회」를 주최(국민회의 당사 앞)하고, 여·야 국회지도부와 면담하여 ‘국회 특위 구성과 연내 특별법 제정’ 약속을 받아냄
9. 16 재경 제주 4·3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 유족회(회장 강종호) 발족(제주도민회관)
10. 11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발표
10. 14~15 「1999 서울 NGO 세계대회」(올림픽공원) 부스 참가
11. 1 「제주4·3피해배상등에관한특별법(안) 공청회」 (국회 의원회관소회의실)
11. 18 한나라당,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안” 국회 제출
11. 24 새정치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 4·3사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 발표
11. 26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결
11. 26 제주지역 4·3 연대회의 소속 4·3특별법 제정 촉구 상경투쟁단과 범국민위, 한나라당 및 국민회의 지도부와 면담
11. 29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한나라당이 제출한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상수)로 이첩
12. 1 새정치국민회의, “제주4·3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국회 제출
12. 6~7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한나라당과 국민회의가 각각 제출한 “4·3특별법안”을 병합 심의하고, 이를 행자위 자체 법안으로 단일화함
12. 13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과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의결
12. 16 국회 본회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과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의결

2000년

1. 11 김대중 대통령,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서명
1. 15 제주4·3특별법 제정경과 보고대회(종로성당)
4. 1 제주4·3 제52주기 추모식 및 「제주4·3 위원회의 과제와 활동방향」 토론회(경동교회 내 여해문화공간)

2003

9. 4. '제주4.3 진상규명의 현단계와 과제' 토론회-<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재경 제주4.3 희생자및피해자
유족회,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 범국민위원회, 제주4.3연구소)

2006

3. 29 4.3正名을 위한 대토론회 (국가인권위 배움터, 주최: 4.3범국민위, 60주년 추진위)

4.3항쟁 5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토의자료

- 1996. 12. 21 4.3항쟁 50주년 사업 준비 실무자 MT

3. 왜 지난 일을 다시 들추어 내는가?(50주년 사업을 하는 의미)

- 1) 억울하게 죽어간 수만명의 양민과 그 유족의 한을 풀어야 한다.
- 2) 제주도민 전체가 4.3으로 피해의식에 찌들리고 오그라들게 되었다. 4.3의 진상을 밝혀내
고 국가적으로 이를 인정,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게 할 때 제주도민 전체가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설 수 있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 3) 건국과 분단 과정에서 있었던 비극적 과오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할 때 나라의 민족적
정통성과 정당성이 세워지고 화해를 이룩할 수 있으며 통일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4. 50주년 사업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낼 것인가?

- 1) 4.3 진상 규명을 일보 전진시킨다.
- 양민의 억울한 희생의 실상을 밝혀내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50주
년을 계기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3의 총체적인 진실(성격) 규명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토대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
- 2) 전국(민)적 차원에서 4.3을 해결되어야 할 민족사적 과제로 쟁점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이
과제를 담보할 주체를 형성한다.
- 참된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 또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4.3의 진상규명과 명
예회복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한 양심세력의 공감과 참여를 이루어 낸다.
- 3) 제주도민 속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피해의식을 극복해 낸다. 이를 통해 4.3희생자 유
족들이 피해의식을 떨치고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낸다.
- 4) 4.3에 대한 국가적, 제도적 해결대안으로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특별법 제정을 제기한다.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조직구성 및 사업 계획(안)

1. 구성의 취지 및 목적

- 1)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을 전국적이고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킨다.
 -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제주도의 문제가 아닌 민족사적인 과제로 제기하고 이를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킨다.
- 2)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4·3 제50주년 사업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지, 연대한다.
 - 제주도민들이 피해의식을 떨치고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전국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 3) 이를 위해 서울에서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 49주년을 맞아 국민위원회를 발족하고 49주년 추모행사를 시발로 학술토론회, 4·3특별법 제정운동, 50주년 행사, 4·3역사신문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 4)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금까지의 진상규명 노력을 일보 전진시킨다.
 - 양민의 억울한 희생을 밝혀내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50주년을 계기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3의 총체적인 진실 규명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토대를 다진다.
- 5) 50주년 이후에도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을 계속해 나갈 주체를 형성해 낸다.
 - 참된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 또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한 양심세력의 공감과 참여를 이루어 낸다.

2. 주요사업(안)

범국민위원회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과 더불어 학계나 문화예술계 등에서 관련된 여러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주 4·3 50주년 기념사업'이라는 큰 틀로 모아 나가도록 한다.

- 1) **진상규명 사업 : 그간 진상규명 활동의 성과를 학문적으로 종합하고 대중화한다.**
 - 대규모 국제학술대회 개최 : 서울 및 제주
 - 4·3 연구 모임 구성 : 50주년까지 1차 백서 발간 목표
- 2) (가칭)[제주 4·3 진상규명·명예회복과 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운동
- 3)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조직하기 위한 사업**
 - 역사기행 : 노동자, 학생, 시민 등
 - 문예 사업 : 공연, 전시회 등
 - 홍보사업 : 소식지 발간, 4·3의 진실을 바로 알리기 위한 「4·3역사신문」 발간 등
- 4) 49주년 및 50주년 추모 행사

- 지금까지 제주사회문제협의회와 제주도 출신 학생등 중심의 행사에서 제주도 출신 외의 각계각층에서 참가하는 행사로 확대

5) 9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쟁점화를 위한 활동

- (예) 4·3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각 후보진영에 공개질의서 발송 등

6) 국제연대활동

- 국가테러리즘에 관한 동아시아 인권위원회의 국제심포지움(제2회) 제주 행사 지원
-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활동 등 검토

7) 기타

- 박재동 화백의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활동 지원 등

3. 조직구성(안)

1) 구성원칙

-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급 인사와 제주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양심적인 시민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직한다.
- 각 사회단체의 조직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되 형식은 개인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 [범국민위원회]는 서울에서 구성하고 제주도(범도민 위원회)와 일본에서 조직되는 단위와는 별도 조직으로 하되 상호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범국민위원회 회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보한다. 재정은 회원의 참가 회비(일반 회원 1인당 20,000원, 특별회원 회비 100,000 원 이상)를 기본으로 하여 운영한다.

2) 구성

◇ 고문

김성수(전 대한성공회 대주교) 박형규(목사) 김관석(목사.새누리신문 이사장) 이돈명(변호사.전 조선대총장) 신창균(전국연합 고문) 예춘호(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이사장) 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이세중(변호사.전 대한변협회장)

◇ 자문위원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이효재(이화여대 교수) 박현서(한양대 교수) 주종환(참여연대 이사장) 김진균(서울대 교수) 송기숙 (전남대 교수) 명노근(전남대 교수) 신용하(서울대 교수) 백낙청(서울대 교수) 고은(시인) 신경림(시인) 이창복(전국연합 상임대표) 조준희(변호사) 김창국(변호사.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박순경(한신대 교수) 이해동(목사) 김상근(목사) 이이화(전 역사문제연구소장) 김석범 (재일작가) 강재연(일본 대판대교수) 한상복(서울대 교수) 김금수(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한승헌(변호사) 장임원(중앙대 교수) 박상규(홍익대 교수) 정진동(목사) 문정현(신부 지선(스님))

◇ 상임대표

김찬국(상지대총장)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서울대 석좌교수)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정운형(홍익대 법경대학장)

◇ 공동대표

김동완(목사) 김승훈(신부) 효림(스님) 김상곤(한신대 교수.민교협 대표) 구중서(민예총 대표) 최영도(변호사.민변대표) 천영세(전국연합 공동대표)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이수금(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연수(전국빈민연합 의장) 지은희(여연 대표) 박정기(유가협 공동대표) 김정기(서원대 교수.역사문제연구소장) 고부자(제주학회 회장)

◇ 운영위원

서경석(전 경실련사무총장)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현기영(소설가) 김홍식(명지대 교수) 유흥준(영남대 교수) 박재동(시사만화가) 박원순(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 전경수(서울대 교수) 김순태(방송대 교수) 안병욱(카톨릭대 교수) 서중석(성균관대 교수) 광노현(방송대 교수) 임현영(문학평론가) 고원정(소설가) 김세균(서울대 교수) 황상익(서울대 교수) 백승헌(변호사.민변 사무국장) 김영범(대구대 교수) 강창일(배제대 교수) 양문흠(동국대 교수) 양길현(경남대 교수) 양운진(경남대 교수) 김영대(민주노총 사무총장) 김명식(시인) 김용태(화가) 임진택(민족극협의회 대표) 김봉우(민족문제연구소장) 박성민(변호사) 유기홍(한국청년단체협의회 대표) 김경남(교회협의회 인권위 총무) 한동완(서강대 교수) 김성례(서강대 교수) 김사인(문학평론가) 김남일(소설가) 김진경(시인) 이영진(시인) 안영도(변호사) 고희범(언론인) 강창재(변호사) 나병식(출판인) 인병선(민속연구가) 김석희(소설가) 현천욱(변호사) 윤명선(전국민주열사추모사업회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학철(동 집행위원) 김승만(제주사회문제협의회 회장) 백경진(제사협 부회장) 고은수(제사협 부회장) 김영철(제사협 운영위원) 황인성(전국연합 집행위원장) 김민주(재일본 역사가) 최규엽(전국연합 정책위원장) 김재훈(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이사) 강동선(목사) 최성각(소설가)

◇사무처장

허상수(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안) (1998.01)

<1>50주년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세우자.

1.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제주 4·3진실규명·명예회복 운동에 있어서 역사적 분기점이다.

1)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김대중 후보의 당선은 건국 이후 최초로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는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김대중 당선자의 정책노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간에) 김대중 정부의 등장으로 권위주의 독재세력과 반독재 민주화 세력의 대결로 이어져온 우리 현대사에서 마침내 민주화세력이 승리하여 정치적 정통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우리의 현대사가 다시 쓰여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김영삼 정권이 그랬던 것과 같은 정권의 정략적 수단으로서의 역사 바로세우기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로서의 역사 바로세우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는 올해는 건국 반세기를 매듭짓고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하는 민족사적 전환점에 위치해 있다. 나아가 세계사적으로, 민족사적으로 파란만장했던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 21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는 실로 여러 측면에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3)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김대중 정부 출범은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운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아닐 수 없다.

제주 4·3은 우리 현대사가 안고 있는 질곡의 뿌리이다. 여든 노인으로부터 갓난 어린애까지 수만명의 사람이 아무 죄 없이, 때로는 영문조차 모르고 줄줄이 죽어갔다. 그리고 무려 반세기 가까이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 입을 열지 못했다. 이데올로기의 광기와 권력의 공포가 진실과 정의를 짓눌러버리는 질곡의 뿌리에 제주 4·3이 있다. 이 질곡의 역사는 청산되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그것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왔고, 김대중 정부는 4·3을 침묵하게 했던 바로 그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맞서 싸워온 현대사의 큰 흐름 위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정부가 질곡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21세기 민족사에 어떠한 희망을 걸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4·3이 반세기를 맞이하는 올해에, 건국 이후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통해 출범하는 김대중 정부로 하여금 제주 4·3에 대해 역사적으로 한 매듭을 짓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매듭이 우리가 바라는 바에 다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전된 수준만 된다면 하나의 매듭을 짓을 필요가 있다. 역사는 끊임없이 되새겨지는 것이지 어느 시점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매듭과 더불어 4·3도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2. 4·3 진상규명·명예회복을 둘러싼 현실적 상황과 근거

지금까지는 당위적인 측면을 주로 보았다면, 이제 제주 4·3을 풀 수 있는 근거와 그 수준을 좀더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김대중 후보와 국민회의는 그 동안 수차례 걸쳐 제주 4·3에 대한 전향적 접근을 공약해 왔다. 김대중 후보는 세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누차 4·3 당시 양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도 한겨레신문 토론회에서 그렇게 언급했다. 또한 지난 9월 20일 열렸던 정당초청 정책 토론회에서도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 의장이 “4·3사건은 제주도 도민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 현대사의 비극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비극이며, 더 이상 외면·방치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 및 특별법의 제정, 특위작업을 토대로 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및 위령사업의 실시 등”을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제시했다. 이것은 과거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발언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또 그것을 구실로 시늉만 했다. 그러나 김대중 ‘후보’와 국민회의는 이제 대통령과 집권당이 되었기 때문에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2) 이번 선거에서 제주도민은 김대중 후보에게 40%가 넘는 표를 던졌다. 그동안의 선거결과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제주도 현역 국회의원 3명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투표결과는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것은 김종필-박태준과의 연대를 통해 충청도와 영남에서 표를 늘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제주도에서 4·3문제가 광범위하게 공론화되어 온 점이 이번 투표결과에

상당히 크게 작용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말해 이번 선거결과에는 4·3문제의 전향적 해결에 대한 제주도민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적어도 제주도에서는 4·3을 푸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은 앞으로 외면당할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제기해야 한다.

3) 올해는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와 행사가 이어질 것이다. 방향과 수준은 다를지라도 정부 수립의 의미와 공과를 논할 때 제주 4·3을 아예 논외로 치부해 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든 언급이 된다고 할 때 최소한 논의의 장이라는 의미에서라도 제주 4·3을 푸는 데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 이처럼 전반적으로 보면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진일보시키는 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상당한 제약도 있다. 우선 김대중 정부는 수구적인 자민련과 손을 잡고 가까스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동안 현대사를 지배해 온 수구적 권위주의 세력이 이번에 크게 타격을 받기는 했지만 정권 안팎에 만만치 않은 힘으로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력은 제주 4·3을 푸는 데 저항요인이 될 것이고, 또한 4·3을 풀어나가는 방향과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김대중 정부는 IMF체제 하에서 경제문제를 푸는 데 역량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다. 이것은 4·3 해법찾기를 둘러싼 논란이 복잡하거나 첨예해 질 때 회피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반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더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3. 50주년에 무엇을 이루어 낼 것인가?

첫째, 이번 50주년 사업을 통해 4·3에 대한 역사적 해결의 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소간 당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 왔다. 실제 사업에서는 4·3을 좀더 폭넓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행사를 좀더 크고 다양하게 해보자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는 당위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국가, 즉 정부나 국회 차원의 실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는 4·3 진실규명·명예회복 조치의 수준과 방향은 어떤 것인가?

광주항쟁의 경우는 4·19처럼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했다. 그러나 제주 4·3의 경우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정통성의 문제를 매듭짓기는 어렵다. 정통성의 문제로 말하자면 그 당시 주도세력이 내걸었던 단정 반대니 반미 항쟁이니 하는 주장과 그 실현방법이 근본적으로 옳은 것이었는지 잘못된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사실이나 이념적 견해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 분단과 대결이라는 엄연한 현실이 가로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입장과 견해가 어떠하든간에 누구도 이러한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4·3의 역사적 정통성 문제는 좀더 훗날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적어도 제도권 차원에서 일정한 매듭을 짓고자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정부든 우리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억울하게 죽었으니 그 한을 풀어달라는 식으로 만들

어 버려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항쟁세력과 이른바 ‘양민’을 갈라세우는 문제가 되어 버린다. 항쟁세력과 양민을 억지로 갈라세우려 한다면 이는 당시의 사실과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상처를 덧나게 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한 매듭을 짓는다고 했을 때 현단계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문제해결의 방향과 수준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제주 4·3이 ‘정당방위적 저항권 행사’로서 정당한 것이었으며 미군정과 정부의 과도하고도 무단적인 진압[“민간인 대량살륙작전(A program of mass slaughter among civilians)"]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진실규명·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어야 한다. 정통성 문제는 논외로 하되 전체적인 정당성은 분명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과 제주를 망라하여 모든 역량을 조직하고 조직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50주년을 맞는 올해에 실마리를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는 1-2년이 걸릴 수도 있다. 광주의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예컨대 국회에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몇달 내에 끝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50주년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힘을 모으는 것과 함께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점은 서울에서도 그렇지만 제주도에서는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제주도의 모든 민주적, 양심적 역량을 총집중하고 일반 도민들까지도 폭넓게 조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4·3 진실규명·명예회복을 위한 50주년 사업 개요

1. 모토

(1) 4·3반세기, 올해를 기필코 4·3명예회복의 해로 만들자!

(2) 4·3명예회복을 위한 범도민적, 국민적 운동의 바람을 일으키자!

-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하자!
- 우리가 가진 모든 끈을 이용하자!

(3) 대담하고, 과감하게!

4·3진실규명을 둘러싼 정세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토의

- 98.4.25 범국민위 운영위-사무처 연석회의 안건 중에서

1. 50주년 사업의 성과와 변화된 상황 인식

▲성과

- 1) 전국화 : 제주도 지역 문제에서 전국적, 국가적 문제로 끌어올림.
- 2) 인권문제화 : 폭동/항쟁 이분법을 극복하고 4·3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여 부각시키는데 일정하게 성공함으로써 폭넓은 공감 획득 ->전국화에 따르는 이념적 쟁점화 차단.
- 3) 합법화, 공론화 : '금기'에서 합법적 논의로. 특히 중앙 언론들이 처음으로 4·3을 해결 과제로 제기.
- 4) 제도권 의제화 : 문제제기 단계에서 정치적-제도적 해결단계로 진입시킴.

▲ 변화된 상황인식

- 1) 이상의 성과들은 1차적으로는 지난 10여 년간에 걸친 제주도민들의 힘겨운 투쟁 위에서 50주년이라는 시기적인 상징성과 정권교체라는 유리한 계기/조건, 그리고 이러한 상징성과 계기를 포착해 낼 수 있게 한 국민위의 활동이 상승적으로 어울어지면서 만들어낸 것이다.
- 2) 지금까지는 주로 파묻혀 있던 4·3을 드러내는 활동에 집중해 왔다. 우리의 성과와 한계가 모두 이 지점에 놓여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에 더해서 제도적 해결대안을 마련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실행해 나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으로서 정책적 역량과 정치적 대응력의 개발/동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 3) 한편으로 4·3이 일정하게 공론화되고 제도권의 의제로 채택되기에 이르렀지만 아직 4·3의 진실과 그 역사적 해결의 당위성을 광범위한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1단계 과제 도 아직은 대단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아직은 진보적 지식층과 운동세력, 학생 정도의 수준에서 4·3을 되살려 낸 데 불과하다. 4·3의 해결을 위한 국민적 역량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 4)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최근 정국의 흐름이 개혁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기보다는 수구세력이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들 수구세력들이 4·3을 이념적 대립의 문제로 변질시키면서 4·3의 정치적, 제도적 해결을 방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2. 향후 활동방향

이상과 같은 현실인식에서 볼 때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해 왔듯이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

- 1) 4·3논의의 합법화라는 성과를 극대화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4·3의 진실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보다 더 과감하고 다양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
- 2) 제도적 해결대안을 만들어내는 정책활동과 정치적 대응활동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동원해야 한다.
- 3) 4·3문제 해결에 대한 정당성, 압력을 강화하고 수구세력의 방해책동을 제압하기 위해 양심적인 사회지도층(중간세력)의 참여폭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기존에 참여해 온 단체, 인사들은 참여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것과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종교계 인사, YMCA, 흥사단, 경실련 등 중간세력들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4) 제주도와 서울 사이에 보다 더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알리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각자 활동하면서 서로 지원하는 정도로 충분했으나 앞으로는 정치권에 대한 대응, 정치권을 압박하는 대중활동, 상층 활동 등 여러측면에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의외의 교란요인들로 인해서 성과를 잃어버릴 수 있다.

제주4·3 범국민위원회의 향후 진로와 활동방향에 대한 제언

- 2000. 1. 15 특별법 제정 보고대회

1. 현재의 상황과 제주4·3 범국민위원회의 진로

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되어온 4·3 진상규명·명예회복 운동은 하나의 결실을 거두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4·3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기구 차원에서 4·3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게 되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 이내에 4·3사건에 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을 완료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2) 지금까지 다양한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4·3의 경과와 성격은 거의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세력은 여전히 4·3을 이념논쟁으로 끌고 감으로써 진실을 왜곡하려 하고 있으며, 그것이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4·3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그 진실에 합당한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활동에 있어서 간단치 않은 진통과 갈등이 예상된다.

3) 한편 지금까지 진상규명 활동은 주로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연구와 제주도 현지에서의 증언 채록에 의존해 왔을 뿐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공식·비공식 자료 및 진압 작전 관계자들의 증언 등 진상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최근 대전형무소에서의 즉결처형 사실이 공개된 것처럼 한·미 양국 정부 자료를 통해 양민학살의 진상을 보다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회가 새로운 자료발굴을 포함하여 진상규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미국 역시 일부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으나 4·3 당시 미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4) 요컨대 특별법 제정은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의 종착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는 계기일 뿐이다. 제도적, 정치적인 측면에서나 자료의 측면에서 4·3의 진상규명이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반면, 그것이 방해받고 왜곡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5) 제주4·3 범국민위는 그 동안 사회 각계의 참여와 지지 속에서 전국적이고 전국민적으로 제주4·3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압력을 형성하는 데 일조해 왔다. 범국민위가 추구해 온 진실의 철저한 규명과 참다운 명예회복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일 뿐 아니라 더욱 끈질긴 노력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4·3 범국민위는 활동내용과 방식에 변화를 기하면서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제주4·3 범국민위의 향후 과제와 활동방향

- 1) 제주 4·3과 관련하여 제1차적인 과제는 여전히 진실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밝혀내는 진상규명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 성과에 근거하여 향후 참다운 명예회복은 물론 피해배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운동까지 고려한다.
- 2) 진상규명의 일부로서 특히 4·3 당시 양민학살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올바르게 구성되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참다운 명예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 시행령의 제정과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
 - 위원회 활동이 왜곡되지 않게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외적 작업 : 위원을 통한 작업 및 전문가, 사회각계를 통한 압력 형성
- 4) 미공개 자료 발굴과 국제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와 인권단체, 국내 연구자, 법조인, 제주도 내 연구자와 기자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미국 내 자료 확보와 국제적 여론 형성을 위해 미국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 5) 대중사업 및 여론화를 위한 활동은 위원회의 진전상황, 자료 발굴, 소송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구체화시켜 나간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

- 서론 부분 발췌(2003.7)

1. 4.3보고서의 의의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4.3보고서)는 사건 발생 이후 반세기 동안 이어져온 '제주 4.3'과 그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식(규정)을 공식적으로 전환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지난 반세기 냉전과 분단의 현실 속에서 4.3은 "공산주의자의 폭동"이요 "반역"이며, 그 희생자들은 '폭도'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었다. 그로 인해 그 유족들은 억울한 희생과 함께 그 억울함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중의 한을 안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그 희생자의 대다수는 '폭도'나 '죄인'이 아니며, 국가의 과오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었음이 사실로 인정되게 되었다.
- 내용적으로 4.3보고서는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4.3진상규명 운동의 성과를 집약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나마 새로운 증거자료들을 발굴하여 그 성과를 발전시키고 있다. 물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진상규명의 성과들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의 활동과 그 귀결로서 보고서의 발간은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한 신원(명예회복)과 더불어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질곡에서 벗어나 인권의식을 심화시키고 진실에 기초한 참된 화해의 초석을 놓은 계기로서 의미를 가진다.

2. 보고서의 근원적인 한계

- 보고서는 '역사적 시각'(역사의식)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의 진상규명은 '제주4.3'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에 대한 평가와 자리매김을 회피(또는 유보)하고 있다.
- 4.3은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어났고, 그 의미(성격)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해방된 나라에서, 자주독립된 민족국가, 참된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민중의 자주적인 움직임에 대해 당시 남한을 '점령' 지배한 미국(미군정)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고 탄압함으로써 생겨난 해방정국의 근본적 대립구도의 표출이다. 당시 미군정은 자주독립된 민주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중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부정하고, 한반도에 반소 전진기지로서 친미정부를 수립하려 하였다. 미국 및 미국을 등에 업고 친일세력을 결집한 이승만은 단선단정에 의한 친미 분단정부 수립으로 내달음으로써 민중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요컨대, 민중의 자주적인 움직임-탄압-저항의 한 국면이 제주4.3이었다.
- '제주4.3'이라는 기호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지배세력은 '4월 3일 봉기'의 주체와 양상만을 내세워 '공산주의자의 폭동'으로 규정해 왔다. 봉기의 원인, 봉기 전후의 맥락과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눈을 가려버렸다.
-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제주4.3은 자주독립국가 수립운동-단선단정반대 투쟁과 부당한 탄압에 대한 저항으로서 일제 하부터 이어진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계승이며, 당시 광범위한 민중의 요구와 열망을 받아안은 싸움으로서 민족사적 정통성 위에 있다. 제주4.3항쟁이다.
- 다른 한편으로 3만여 명의 양민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을 포함하는 참극이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제주4.3'이라는 기호는 또다른 의미(성격)를 가지게 되었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의 의미이다. '제주4.3'은 역사적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논외로 하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기준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태이며, '청산되어야 할 과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그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폭력이 자행된 배경은 바로 미국에 의해 주도된 단선단정과 그 결과로 탄생한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 결여이다. 단선단정과 이승만 정권은 민족사적으로나 현실정치적으로나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4.3봉기'의 원인은 논외로 하고 그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량 학살과 인권유린이 자행된 것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단선단정과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을 힘으로, 도전 자체를 물리적으로 짓밟음으로써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무자비한 폭력을 동원한 것이다.
- 요컨대 '제주4.3'의 전체적인 면목은 민중의 자주독립과 통일국가 수립, 토지개혁 등 민중의 생존과 진보적 사회개혁의 요구에 기초한 민중의 자주적인 움직임(운동)->이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과 단선단정의 추진->민중의 저항->국가폭력을 총동원한 무자비한 폭력적 탄압(대량학살과 인권유린)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대립의 성격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배제한 채 단지 인권유린이라는 차원에서만 진상을 밝히는 것으로 4.3의 진실이 온전하게 규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4.3은 민족해방운동의 계승으로서 자주독립된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민중의 정당한 투쟁, 그리고 그러한 정당한 투쟁에 대해 외세(미국)와 반민족세력(이승만 정권 및 친일세력)이 자행한 무자비한 탄압(대량학살, 인권유린)으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 때까지 4.3의 진상규명은 끝난 게 아니다.

1부 (발표 및 주제토론)

김영순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제주 4·3 70주년 토론회

제주 4·3 70주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2부 (종합토론)

• 좌 장 : 위성곤 국회의원

• 토 론 :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

강덕환 (전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김종민 (전 제주4·3중앙위 전문위원)

고창덕 (도자치행정국장)



2부 (종합토론)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2부 (종합토론)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

【토론문】

4·3 70주년, 그 해결을 위한 과제

강덕환/(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 왜 70주년인가?

1. 지난해 11월 과거 나치 정권 당시 집단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1942년부터 1944년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30만 명의 학살을 방조한 죄로 오스카어 그뢰닝(95살)에게 독일 연방법원은 4년형을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

- 재판에서 그뢰닝은 "나는 큰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했다"라고 소명

- 시사점 :

1) 집단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방조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 죄를 엄중히 묻고 있다는 점

2) 오랜 시일이 지났다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피해갈 수 없는 준엄한 역사적 단죄

2.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표준안 발표

- 지난해 11월 국정교과서에 소개된 4.3사건은 200자 원고지 1매 정도의 분량으로 축소, 왜곡하여 서술하는 노련함(?) 발휘

-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참혹한 사건이었음에도 귀찮은 '손톱의 때' 정도로 홀대

3. 박근혜 정부

- 지난해 10월 교육부 산하 기관장(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기동)이 국정감사장에서 4.3을 '공산폭도들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답변

- 정종섭 안행부장관 저서(2014) "공산주의 세력 무장봉기" 4.3희생자 재심의와 대통령 참석(2015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의 모 교회 강연(2012년) "제주도 4.3 폭동사태라는 게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제주도)반란을 일으켰어요"라고 언급.

-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관료의 4.3에 대한 인식은 바뀌고 있지 않음을 확인

⇒ 이러한 일들은 4.3발발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많은 시사점 제공

□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의 노력	과제
진상규명	도민(4.3단체 및 사회단체, 유족,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요구 도의회 4.3특위 활동 도내 방송 및 신문 등의 노력 제주4.3사건특별법 제정 진상조사보고서 확정(정부) 추가진상조사(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정명 찾기 • 미국의 책임규명 • 행불인, 수형인 조사 • 가해자 조사 • 물적피해, 정신적 피해조사 • 마을별 세부 조사 • 유해발굴 및 유전자 검색을 통한 가족 찾기
책임자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모독행위자 처벌 (계급, 훈장, 보훈자격 등 박탈) • 공소시효 배제 • 사면 제한 • 재판(법적, 사회적) • 국제형사재판(ICC)고발
배상.보상	공동체적 보상 - 4.3평화공원 조성 - 4.3평화재단 출연 - 유족지원(진료비, 생활지원금, 장제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상회복, 금전적, 물질적 배상 • 희생자 및 유족 보호책 마련 • 트라우마센터 • 배보상 관련 4.3특별법 개정 내지 법 제정
명예회복	대통령 사과 희생자(14,231명) 및 유족(59,225명)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생자 및 유족신고 상설화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책임자 사과 • 수형인 명부(일반재판, 군사재판) 무효화 • 연좌제 기록 멸실
정신계승	4.3평화공원 조성 4.3평화기념관 개관 4.3평화재단 설립 세계평화의 섬 지정 4.3희생자추모사업(추념일 지정) 문화학술사업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4.3평화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보존(기록유산 등재) • 교육(역사교과서) • 추념과 기념사업(뺨지, 우표, 엽서, 비행기표 등) • 평화공원 조성(4단계) • 유적지 복원정비(문화재 등재) • 재발방지책(자기 진술 내지 고백의 장 마련) • 왜곡된 4.3기록 수정(인터넷 등) • 4.3평화인권 고양 사업 (세계평화의 섬 및 제주포럼을 통한 4.3논의 활성화, 전국순례, 평화메신저 양성, 전국순례, 도민법정) • 공휴일 지정 • 4.3평화재단 활성화 • 4.3관련 도 조직 개편

※ '17년 대선, '18년 지방선거 아젠다 마련 및 사업추진 조직구성, 예산 확보

2부 (종합토론)

김종민 (전 제주4·3중앙위 전문위원)

〈토론문〉

제주4·3 70주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 창 덕(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먼저 2018년 4·3 제7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위해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하여 주신 우리 지역구 세분 국회의원님과 “제주4·3 70주년 기념위원회 준비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4·3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각하는 4·3 제7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3 제7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즉 행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행정은 공익, 정의, 복지, 형평성, 평등, 자유 등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인간다운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4·3에 적용해 보면, 4·3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아픔을 해소하고, 국민화합 더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4·3해결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원희룡 도지사께서 4·3해결의 3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공동체적 관용 정신의 원칙, 둘째 국민화합과 세계평화 가치 구현, 셋째 미래세대 교육 전승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앞서 말한 행정의 역할과 4·3해결의 지향점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가오는 제70주년 기념사업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 생각하는 4·3 제70주년 기념사업의 목표는 지금까지 4·3해결의 성과를 시간적으로는 미래세대에게, 공간적으로는 전국적·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4·3의 전국화 실현 및 세계화의 질적인 성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해 12월 23일 “제주4·3 제70주년 기념사업 준비 TF” 구성하여,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4·3해결의 성과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고, 70주년 사업을 이끌어갈 최적화된 조직 형태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70주년 기념사업에서도 모범적인 민관협치의 모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런 기본 가치와 원칙하에 두 분 발제자(이규배 교수, 김수열 시인)의 발제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규배 교수님의 발제문 “제주4·3 70주년, 논의의 준비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4·3해결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주기별로 40주년은 어려움 속에서 공개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50주년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제정 운동이 본격화, 60주년은 4·3운동의 결실인 4·3평화재단의 설립 등 조직적인 4·3사업이 수행된 시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주년은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4·3사건법 제정,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채택, 4·3평화공원 등 조성, 4·3에 대한 의료비·장제비 지원, 출판사업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4·3해결을 위한 대정부 7대 건의안’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으로 여전히 ‘4·3흔들기’가 남아있어서 국민의례에서 4·3영령 제외 규정, 4·3평화기념관 전시금지 소송 등의 침해, 유적지 훼손, (국비로 지원해야 하는) 유가족 지원의

도비 지원 사례와 추가적인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정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열 시인의 발제문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는 지금까지의 4·3문화예술제의 역사를 바탕으로 4·3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5.18민주화운동 해결의 5대원칙에 따른 4·3해결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분 발제자 모두 4·3해결의 오랜 과정을 몸소 실천했던 분들이라서 그런지, 발제문에는 특별히 지적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제문에 대해 사안별로 토론하기 보다는 도의 입장을 총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4·3해결 노력은 실제로 4·3사건이 끝나자마자 시작하였습니다. 1956년 첫알오름 학살터 희생자 수습, 1960년 제주대학교 ‘4·3사건 진상규명 동지회’ 활동, 1978년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 발간 등 어려운 시대에도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1987년 이후에 본격화된 진상규명 노력은 1988년 제주4·3희생자유족회 창립, 1989년 4·3연구소 설립, 1993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등의 조직적 성과를 비롯하여 1994년 도의회에서 14,125명의 희생자를 확인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주도민의 진상규명 노력의 결과가 2000년 제정된 4·3사건법입니다. 그 이후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같은 해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님 사과, 2006년 노무현 대통령님 “4·3희생자 위령제” 참석, 2008년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과 제주4·3평화재단 설립 그리고 2014년 3월 24일에는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주4·3은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추모하는 국민적 의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모든 도민이 합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도에서도 항상 4·3희생자와 유족의 입장을 우선 고려했고, 4·3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이런 바탕위에 4·3해결을 위한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및 가족찾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행방불명인 발굴유해 400구 중 92구만이 신원이 확인되었을 뿐, 다수 유해는 여전히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주공항 내에 300여구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유해를 찾는 것은 그 어떤 이념이나 가치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고령 유족들의 생전에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4·3희생자유족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배.보상 문제를 비롯한 희생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배.보상 문제는 유족과 도민들이 생각하는 4·3해결의 과제 중 가장 미진한 부분입니다. 배.보상 요구를 위한 확실한 근거와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족과 4·3 전문가들과 함께 가능한 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 상설화, 추가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등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견을 다각도로 모아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셋째,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에게 제주4·3을 알리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직도 제주4·3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외로 범위를 넓히면 더 많아 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올해 1월 9일 제주도 교육청과 충청북도 교육청이 체결한 '수학여행 교류.협력 지원 업무 협약'이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협약에는 수학여행단이 제주4·3평화공원과 충북 영동군 노근리 평화공원을 상호 방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4·3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4·3알리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4·3 제70주년 기념사업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4·3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미완의 과제들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제주4·3 제70주년 기념사업 준비 TF”와 제주4·3실무위원회 등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주공동체의 화합과 국가의 책임에 따른 국비 지원, 미래세대 전승 등의 원칙 아래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3 모독행위 처벌규정” 등입니다. 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4·3단체, 그리고 도민과 함께 조급하지 않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70주년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까지 도민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018년도 국비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지역구 세분 국회의원님과 함께 대정부 절충 등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주최 측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4·3유족과 도민의 의견이 곧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이라는 생각으로 4·3 해결의 과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